

## 전후 미국의 일본점령정책과 덩지·라인

서 정 익

---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1947년 냉전이 시작되면서 비군사화에서 경제부흥으로 그 기조가 변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보루로 만들고 '극동의 공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덩지·라인은 미점령군의 경제고문으로 일본에 온 덩지에 의해 1949년부터 1951년에 걸쳐 시행된 일본의 경제안정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덩지·라인의 중심내용인 종합균형재정의 달성과 단일환율제도의 성립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안정공황에 대한 연구이다. 덩지·라인으로 전후의 인플레이션은 극복되고 재정적자가 해소됨으로써 일본경제는 미국원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덩지·라인의 실시는 전후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일본경제에 반영되는 계기도 되었다.

---

### I. 서 론

미국의 대 일본점령정책은 1947년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경제적 능력을 말살시킨다는 비군사화 정책 대신에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보루로 만들기 위해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결정적인 계기는 미소간 냉전의 격화였다.

전후 미소간의 냉전은 1947년 3월 트루만 독트린 발표 이후 표면화되었다.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는 명목으로 원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에 대한 대규모 원조계획인 마샬·플랜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1948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총 120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가 서유럽에 제공되었다. 한편, 소련은

---

호서대 경제통상학부, 충남 아산군 배방면 새출리, 330-180.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2차아파트 202동 801호. 150-056(자택).

동유럽을 포함하는 독자의 세력권을 구축하여 미소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sup>1)</sup>

아시아에서의 정세도 급변하였다. 1947년 5월 중국동북부에서 인민해방군의 반격이 시작되어 7월 이후 총반격으로 전환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미국은 “중국정세는 붕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 대신 일본을 對蘇封鎖政策의 거점으로 삼는 구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1947년 9월 드레이퍼(W. H. Draper) 미육군차관이 방일하여 배상·개혁 대신 부흥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1948년 1월 로얄(K. C. Royall) 육군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전체주의 위협의 방지에 유용한 안정된 자립적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점령정책을 수정하여 민주화·비군사화보다는 경제부흥을 중시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것이 경제안정 9원칙(Nine-Point Economic Stabilization Program)이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덩지(J. Dodge)가 公使 겸 맥아더(D. MacArthur)의 재정고문으로 1949년 2월 일본에 파견되었다. 이후 일본경제는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그의 손에 의해 초긴축재정하에서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덩지·라인에 대해서는 일찍이 井上晴丸·宇佐美誠次郎가 이를 국제자본의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sup>2)</sup> 이들은 전후 5년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1945년 8월~1947년 2월)에서는 국제자본이 일본을 상품수출시장, 두 번째 단계(1947년 6월~1949년 1월)에서는 자본투자시장으로 파악하였으나 덩지·라인 단계(1949년 2월~1950년 6월)에 오면 국제적 연계를 가진 전시경제로의 재편성이 중심과제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즉, 일본을 ‘극동의 공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가 덩지·라인하에서는 단순한 공장이 아닌 군수공장화하는 것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최근에 Borden [2]과 Schonberger [4]는 덩지·라인을 착오의 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淺井良夫 [6]는 세계적인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또한, 伊藤正直 [8]는 덩지·라인에 의해 전후에도 계속되던 제 통제가 해소되어 일본경제가 시장경제로 강제착륙하게 되는 획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의 전환과 함께 추진하게 되는 덩지·라인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균형재정의 성립과 단일환율의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 전개되는 안정공황하에서의 일본경제의 제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1) 神田文人 [17], pp. 226~229.

2) 井上晴丸·宇佐美誠次郎 [9], pp. 275~276.

## II. 영 조사단과 경제안정 9원칙

### 1. 일본경제부흥계획과 영 조사단

1948년 1월경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군 총사령부(GHQ : General Headquarters)는 1947년 후반의 제 경제지표를 분석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본경제는 일시적으로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전망하였다. 같은 해 5월 말에 발표된 일본정부의 제2차 경제백서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10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국민생활은 여전히 어렵지만 국내에서의 석탄 증산과 국제관계에서 연합국의 대일원조증가를 중심으로 경제재건의 전망은 더욱 명확하게 되어 가고 ... 물가의 등귀도 작년 가을이래 그 속도가 약화되어 인플레이션의 파국화를 피할 수 있는 희망도 생겼다”고 쓰고 있다.

광공업생산이 1947년 40%대에서 1948년에는 50%대를 넘고 연말에는 거의 78%(1930~1934년 수준비)까지 상승하고 일본은행권의 연간팽창률도 135%에서 47%로 둔화된 것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앞날에 대해서는 아직 경제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았다. 금융긴급조치 때의 3·3 물가체제(1946년 3월) 대신에 1947년 7월에 설정된 신물가체제<sup>3)</sup>는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적 상승으로 1년이 못되어 붕괴하고, 1948년 6월에는 新新물가체제(補正體系)로 개정되었다. 특히 임금상승으로 물자생산비용과 공정가격의 차이가 확대되어 그 차액은 가격차 보조금과 일본은행 신용에 의한 復興金融金庫<sup>4)</sup>의 적자용자증가로 보전되었다. 신물가체제는 일시적으로 공정가격과 암가격의 격차를 축소시켰으나 3,700엔의 임금베이스는 노동공세의 격화로 가을에 들어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연말의 1949년도 예산을 둘러싼 정부내 절충에서는 5,300엔 내지는 6,300엔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경제백서(1949년 3월)는 인플레이션의 완만화, 물가등귀의 둔화 등 ‘경제안정화의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수입초과의 누적, 기업경영의 불건전성, 국내물가체제와 국제물가체제의 불균형, 외관상의 과잉생

3) 7·7체제. 중요물자의 공정가격을 전전 수준의 60~65배로, 임금수준을 27.8배인 1,800엔 기준에 고정시켰다.

4) 1947년 1월에 설립된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금융기관. 1946년 8월에 일본흥업은행내에 설치된 부흥금융부를 계승하여 발족하고 주로 석탄, 비료 등 중점사업분야에 대출하였다. 1948년 11월 임금 3원칙으로 운전자금의 대출이 정지되고, 덩치·라인하 1949년 3월 신규대출이 정지되었다.

산' 등의 불건전한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서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병존한 것은 '一舉安定論'과 '中間安定論' 논쟁으로 대표되는 경제부흥을 둘러싼 현상인식과 방법론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sup>5)</sup> '일거안정론'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통화개혁을 동반하는 근본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뒤의 덧지·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鈴木武雄, 木村禱八郎 등 일부 재정학자들이 주장하였다.<sup>6)</sup> 이에 대하여 '중간안정론'은 생산을 점차로 증가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씩 처리하자는 생각으로 經濟安定本部(이하 安本) 중심의 관료들과 安本계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의 원조증가와 외자도입에 의존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었다. '외자도입내각'이라 불리고 기획있을 때마다 외자대량도입의 가능성을 천명하여 온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내각은 결국 '중간안정론'에 입각한 경제노선을 선택하였다.<sup>7)</sup>

1948년 5월에 안본을 중심으로 입안된 경제부흥계획 제1차試案도 5년 안에 1930~1934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지만 준비기간(약 반년), 중간안정 제1기(다음 약 1년), 동 제2기(다음 약 반년) 그리고 약 2년에 걸쳐 점차 인플레이션을 극복·경제안정을 이룬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합계 약 16억 달러로 예상되는 국제수지적자는 미국의 원조 또는 외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또한, 6월 중순 안본이 총사령부에 제출한 '중간경제안정계획'도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자의 원조가 없으면 절대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해외의 경제원조가 본격화되고 식량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즉 올 10월까지'는 준비기간으로 보는 외부의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원조증가에 의한 중간안정,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부흥이 논의되고 있을 무렵 미국내에서는 구제중심의 점령지역행정구조계획(GARIOA 원조)을 경제부흥에 중점을 둔 경제협조처(ECA)원조로 전환하는 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크게 삭감된 부흥원조비(EROA 원조)가 GARIOA 예산의 틀 안에서

5) 三和良一 [25], pp. 171~172.

6) 淺井良夫에 의하면 점령기 일본측에서 일거안정론을 주장한 것은 고전적 균형재정론자였던 마르크스주의자뿐이었고, 정책담당자 사이에서는 일거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시체제 붕괴 후에도 일본에서는 통제경제파가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淺井良夫 [7], pp. 183~184).

7) 아시다 내각은 "국내경제자립을 목표로 외자도입을 기대한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결국 아시다 내각은 성립 초부터 외자도입과 경제자립=경제부흥을 기본방침으로 정한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대일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시다 내각은 이 외자도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정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시다는 시정방침연설에서 "외국자본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까지의 장해를 제거하고 외국자본가로 하여금 즐겁게 우리 나라의 산업에 투자하도록 받아들이는 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외자=미국자본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였다(歷史學研究會編 [28], p. 24).

겨우 인정된 상황이었고, 민간외자는 대일진출에 매우 경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에 대한 일본의 높은 기대감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미국이 보여 준 것은 대미의존무드를 경제정책상의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sup>

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9원칙에 대한 일본의 저항은 원조중단이라는 미국의 최후의 카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본래 미국내에도 워싱턴과 총사령부 간에는 상당한 감각의 차이가 있었고,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의 중간안정노선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인정하는 편이었다. 이 시기까지는 소위 섭외교섭을 통하여 미일 사무관리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친화감이 성립되었고, 일상의 절충을 통하여 총사령부의 관리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총사령부 경제전문가 사이에는 인플레이션의 이론적 접근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 결과 1948년 단계에서 사령부의 경제정책은 對症療法的의 제시책을 열거하면서 일본정부의 중간안정론을 묵인 내지 추진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1948년 7월 총사령부 경제과학국(ESS) 국장인 매쿼트(W. F. Marquat) 소장으로부터 쿠리스 다게오(栗栖赴夫) 경제안정본부 장관에게 교부된 경제안정 10원칙은 이러한 미온적 정책의 대표적인 예였다. 또한, 9원칙 지령에 1개월 앞서 완성된 경제부흥계획의 사령부판인 '일본경제자립 5개년 계획'은 14억 달러의 국제수지적자를 미국 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시작으로 安本の 제1차 시안과 거의 비슷한 규모와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외부의존의 온실경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단일환율설정을 포함하는 경쟁적인 국제경제로의 복귀는 연기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경제부흥계획 제1차 시안은 인플레이션 수습이 궤도에 오르는 1949년 11월 이후에 단일환율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총사령부의 담당자는 수출이 연간 7억 달러의 기준에 도달하는 1949년 4~10월경이 되어야 단일환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복수환율체제를 정밀화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본국은 보조금을 동반하는 복수환율제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뿐이고, 원조는 단지 이 불건전한 체계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 복수환율제하의 무역에서는 수출입 환율이 물자별로 정부(무역청)와 총사령부가 국내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상이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제가격과의 차액은 보조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수입초과임에도 불구하고 과잉통화가 살포되고 여기에 업자의 합리화 노력 부족이 더해져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경제안정과 단일환율 중 어느 것을 선행할까는 매우 판단하기

8)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 395.

어려운 문제였지만, 일본정부와 총사령부의 공동전선에 직면한 미 본국은 단일환율의 설정을 통하여 '일거안정'을 달성하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조사통계국 차장 영(R. A. Young)을 단장으로 하는 '엔환율정책에 관한 특별조사단'(Special Mission on Yen Foreign Exchange Policy)을 일본에 파견하였다.<sup>9)</sup>

사절단의 외형상 임무는 환율설정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였으나 5월 14일자 드레이퍼 육군차관으로부터 영 단장에게 주어진 훈령에 "단일환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점령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 본국은 일본경제안정에 관한 보다 광범한 정책적 권고를 기대하고 있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 훈령은 영 단장에게 총사령부와 협력하여 ① 단일환율 설정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 및 설정된 시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 조치, ② 단일환율 설정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엔의 군용 및 무역의 국제적 자본거래용의 새로운 환율 등에 대하여 권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up>10)</sup>

영 사절단은 5월 20일 東京에 도착한 이후 총사령부와 함께 불철주야 검토작업을 한 뒤 6월 12일에는 69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권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48년 10월 1일까지 일반적인 단일환율로 1달러 대 270~330엔 사이에서 결정하는 권한을 총사령부에 부여.
- ② 1948년 7월 1일까지 군용환율<sup>11)</sup>을 1달러 대 270엔으로 개정.
- ③ 총사령부에 의한 무역, 외환통제의 강화.
- ④ 경제안정을 위한 보완적 조치(〈표 1〉 참조).

2개월 전에 나온 드레이퍼-존스톤 보고서가 일본에는 단일환율을 설정할 만큼 경제조건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하여,<sup>12)</sup> 영 보고서는 일본경제를 예리하게 분석한 결과 복수환율제가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적 성격에 주목

9) 영사절단의 멤버는 단장 영 외에 O. J. McDiamid(국무부), A. W. Stuart(재무부), M. Lee(상무부), Lt. Col. P. Feyereison(육군), H. Heuser(육군), A. Hersey(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6명이었다. 일행은 5월 20일 來日하여 6월 12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하순에 귀국하였다.

10)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p. 396~397.

11) 군용환율이라는 것은 점령군 내부에 편의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엔의 일반적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환시세는 아니었고 일본정부 당국과 미리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12) 1948년 5월 18일에 나온 이 보고서는 엔화 환율의 설정 및 민간무역의 부흥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항목을 권고하였다. ① 일본인의 금융, 경제정세가 충분히 안정된 다음 최종적 환율을 결정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현재의 일본경제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외국무역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민간에게 복귀시켜야 한다. ③ 1달러 대 50엔의 현행 군용교환비율은 円價의 상대적 구매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有澤廣巳·稻葉秀三 編 [5], p. 81).

<표 1> 영 권고, 경제안정 10원칙, 경제안정 9원칙의 요점

	영 보고서 권고	경제안정 10원칙	경제안정 9원칙
날 짜	1948. 6. 12	1948. 7. 15	1948. 12. 11
형 식	영 조사단 → 미국정부권고	맥아더 → 아시다내각 내시 → 각의결정	미국정부 → 총사령부 중간지령 → 총사령부 → 요시다수상지령
내 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의 양적 제한</li> <li>2. 예산지출의 20% 삭감</li> <li>3. 징세의 강화</li> <li>4. 원료할당정책</li> <li>5. 임금의 안정</li> <li>6. 외국환통제의 일본은행이판</li> <li>7. 식량집하의 촉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공업의 증강</li> <li>2. 할당·배급제의 강화</li> <li>3. 식량공출의 강화</li> <li>4. 공정가격의 유지</li> <li>5. 임금의 안정</li> <li>6. 징세의 강화</li> <li>7. 조세부담의 공평</li> <li>8. 특별회계의 적자축소</li> <li>9. 외국환통제의 확립</li> <li>10. 신용통제의 강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합예산의 균형</li> <li>2. 징세의 강화</li> <li>3. 신용확장의 제한</li> <li>4. 임금의 안정</li> <li>5. 물가통제의 강화</li> <li>6. 외국환통제의 강화</li> <li>7. 수출증진</li> <li>8. 광공업생산의 증강</li> <li>9. 식량집하의 촉진</li> </ol>
환 율	48년 10월 1일까지 단일 환율(270~330엔)의 설정	언급 없음	단일환율의 조기 설정

자료 : 大藏省財政史室編 [10], p. 397.

하여 '일거안정론'의 입장에서 곧바로 단일환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복수환율제 실시 → 경제부흥 실현 → 단일환율 실시라는 종래의 노선에 대하여 단일환율 설정 → 인플레이션 수습 → 경제부흥이라는 노선을 제기한 것이다.<sup>13)</sup> 이 결론은 총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던 정책과 정면 대립하는 것이었다. 경제과학국은 실질임금의 인상과 생산·수출 확대를 위한 보조금의 적절한 배분문제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정균형을 위해 보조금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 사절단은 이러한 제안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총사령부는 예상했던 대로 영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아더 원수는 곧바로 미 본국에 "단일환율 설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는 무역과 생산 수준이 전전 수준으로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강력한 경제안정조치를 선행시키면 심각한 사회불안이 일어난다"고 반대의견을 보냈다. 복수환율제를 추진하고 있던 경제과학국은 단일환율을 설정하면 디플레이션은 커녕 설정 전후에 급격한 물가상승이 일어난다고 반론하였다.<sup>14)</sup>

영 보고를 심의한 6월 28일 '국제금융문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C :

13) 伊藤正直 [8], p. 7.

14) 大藏省財政史室編 [10], p. 398.

National Adversory Council on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Problems)에서는 이와 같은 총사령부의 반대에 직면한 육군성과 기타 기관대표의 견해가 좀처럼 일치되지 않았다. 그 결과 NAC는 영 권고를 채택은 하지만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administratively possible)라는 표현에 머물러 사실상 10월 1일을 목표로 단일환율을 설정한다는 구상은 유산되었다.

NAC의 뜻을 알고 난 후에도 총사령부는 환율설정은 경제안정 후의 일이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1948년 7월 경제안정 10원칙<sup>15)</sup>이 일본정부에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생산증가                       | ② 할당배급제도의 강화 |
| ③ 식량공출의 효율화                  | ④ 공정가격의 엄수   |
| ⑤ 임금안정정책의 실시                 | ⑤ 징세강화       |
| ⑦ 중세와 세부담의 공평화               | ⑧ 특별회계의 적자감소 |
| ⑨ 무역관리의 개선과 일본정부기관에 의한 외국환관리 | ⑩ 용자통제의 강화   |

그러나 10원칙은 총사령부내에서 충분히 검토된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아니었다. 영 권고의 부수적 조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총사령부의 종래의 주장을 10항목을 정리한 10원칙은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원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디플레이션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원조확대를 전제로 한 낙관적인 '중간안정' 계획을 비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영 권고의 핵심내용인 환율조기설정을 거부하고 독자적 경제안정정책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점령 초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미국정부와 총사령부의 대립이 경제부흥노선을 둘러싼 대립으로 발전한 것이다.<sup>16)</sup>

10원칙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던 국철·郵政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총파업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원칙이 경제부흥을 저해하고 대일원조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총사령부는 공무원의 쟁의권부정을 요구한 맥아더서한(1948년 7월 23일자)을 일본정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아시다 내각은 공무원법 개정에 몰두하게 되었다. 또한, 대장성은 총사령부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제기한 금융업법 제정문제에 대응하느라 분주하였다. 이렇듯 일본정부는 10원칙에 제대로 신경쓸 여유가 없

15) 有澤廣巳·稻葉秀三 編 [5], p. 67.

16)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p. 405~409.



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각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으로 바뀌었다. 이 내각하에서는 고급관료와 당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책입안과 실시의 중심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정책전환과 그 반침대 역할을 할 보수안정정권의 수립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연이었지만, 양자가 지향하는 바는 많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이후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불리는 정책이 급진전되었다.<sup>17)</sup>

하지만 요시다가 총재로 있던 민주자유당은 경제통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요시다 수상은 '선거관리내각'이라고 자인하였기 때문에 10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

총사령부는 10원칙에서도 임금통제를 중시하였지만 12월 11일에 헤플러(W. Hepler) 노동과장의 성명으로 공표된 '기업 3원칙'(임금 3원칙)<sup>18)</sup>을 11월 초부터 일본측에 제시하였다. 이 원칙은 직접 임금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때까지의 임금개정이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았던 만큼 간접적인 엄격한 임금통제를 의미하였다. 이제 총사령부도 경제안정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 2. 경제안정 9원칙

1948년 12월 10일 드레이퍼의 주도하에 NAC가 준비한 경제안정 9원칙은 극동위원회의 중간지령이라는 형식으로 맥아더 원수에게 전달되었다. 총사령부가 여기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령발동의 권한에 대한 근거를 인용하고,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NAC의 승인을 거쳤다는 점을 덧붙였다. 즉, 9원칙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인 NAC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분야의 최고심사기관인 NSC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에 미국의 國家意思로 확정된 것이다. 더구나 9원칙은 독립된 결정이 아니고 대일점령정책의 전환에 따르는 새로운 종합정책을 모아 정리한 '미국의 대일정책에 관한 제 권고'(NSC-13/2 :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U.S. Policy toward Japan)의 일부였다.

NSC-13/2는 1948년 5월 말 국무성의 케난(G. F. Kennan) 정책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입안되어 육해군성과 NSC에서 약간 수정된 후 10월 7일 NSC회의의 승인을 거쳐 10월 9일 트루만 대통령의 인가를 받았다. 그것은 "일본이 점령 종료 후에도

17) 由井正臣 [27], pp. 82~83.

18) 임금인상의 재원을 재정보조금, 공정가격인상, 적자용자에서 구하는 것을 금지한 11월 10일자 헤플러의 通知(大藏省財政史室 編 [14], p. 749).

안정을 유지하고 자발적 의지로 미국의 우호국으로 남도록 경제적·사회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20개 항목에 걸친 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이러한 정책과 경합하거나 저촉되는 종래의 지령 등은 무효로 한다”고 부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9)</sup>

- |                                    |                     |
|------------------------------------|---------------------|
| ① 대일강화의 시기                         | ② 장래에 있을 강화조약의 성격   |
| ③ 재일미군의 축소                         | ④ 강화 후 일본의 안전보장     |
| ⑤ 류우큐우, 남방제도(小笠原), 南鳥島의 장기보유와 기지개발 | ⑦ 경찰력의 강화           |
| ⑥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이용                    | ⑧ 극동위원회(11월 22일 승인) |
| ⑧ 총사령부의 축소                         | ⑨ 총사령부와 일본정부의 관계    |
| ⑩ 대일이사회                            | ⑩ 공직추방의 완화          |
| ⑫ 일본정부로의 권한 이양                     | ⑫ 경제부흥과 경제안정        |
| ⑭ 점령비의 감축                          | ⑬ 미·일문화교류 문제 등      |
| ⑮ 연합군재산의 처리                        | ⑭ 군수산업의 제한          |
| ⑯ 전쟁재판                             |                     |
| ⑰ 배상문제(미결정)                        |                     |

대일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지향한 NSC-13/2은 9원칙에 의해 구체화된 일본경제의 부흥 및 안정을 규정한 제15항과 총사령부의 책임, 기구를 축소하고 점령행정의 권한을 대폭 일본정부에 이양하고 개혁의 실시는 일본측의 자주성에 맡긴다는 제8, 11, 12, 13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sup>20)</sup> 후자는 집중배제, 금융개혁의 중지와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던 노선을 한층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거대한 관료기구화한 총사령부가 일본정부의 행정분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폐해를 시정하려는 것이었다.

9원칙은 10원칙과 상당히 비슷하였다. 하지만 10원칙이 총사령부의 아시다 내각에 대한 권고였던 데 비하여, 9원칙은 미국정부의 총사령부에 대한 중간지령을 맥아더가 요시다 수상 앞 편지를 통해 일본정부에 지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10원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吉野俊彦은 “일본정부가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걸모습을 취한 10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친 사령부가 명령이라는 분명한 형태로 9원칙이 제시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21)</sup> 9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2)</sup>

19) 中村政則 [24], p. 95.

20)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 405.

21) 吉野俊彦 [26], p. 46.

22) 大藏省財政史室 編 [14], pp. 739 ~ 740.

- ① 수출을 엄중히 줄이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수입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대한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종합예산의 진정한 균형을 도모할 것.
- ② 收稅계획을 촉진·강화하고, 탈세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철저한 刑事 訴追措置를 취할 것.
- ③ 용자는 일본의 경제회복에 공헌하는 제 사업에만 주어지도록 엄중하게 한정할 것.
- ④ 임금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작성할 것.
- ⑤ 현행의 가격통제계획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확장할 것.
- ⑥ 외국무역관리의 조작을 개선하고 또 현행 외국환관리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를 적절하게 일본측 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행할 것.
- ⑦ 현행의 할당 및 배급조치를 특히 수출무역을 최대한으로 진흥할 것을 목표로 개선할 것.
- ⑧ 모든 주요 국산 원재료 및 공업제품의 생산을 증대할 것.
- ⑨ 식량공출계획의 능률을 높일 것.

위의 제 방침은 일본정부에 의한 안정화 계획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단일 환율이 확립되는 날에 맞추도록 추진될 것이다.

이 9원칙의 기본적 목표는 위의 제 항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경제의 자립추진이였다. 하지만 일본경제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였다.<sup>23)</sup>

첫째로, 일본경제가 통일된 환율에 의해 국제경제에 결합되어 정상적인 무역을 행할 것. 둘째는 일본이 미국의 대일원조 없이 경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더욱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은 단일환율의 설정이였다.

그러나 단일환율의 설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후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진행되어 온 인플레이션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는데 1945년부터 1950년에 걸쳐 도매물가지수는 70배나 상승하였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공정가격과 암시장가격 사이의 격차가 커져 1946년의 경우 생산재·소비재의 암시장가격이 공정가격의 평균 7배 이상에 달하였다.<sup>24)</sup>

인플레이션이 당시처럼 급속하게 진전된다면 엔의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환율도 계속 바뀌어야 하였다. 환시세가 그렇게 동요하는 상태하에서는 정상적인 국제무역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일본경제는 국제경제 속에 복귀시킨다는

23) 楯西光速 外編 [16], p. 1578.

24) 中村隆英 [23], pp. 149~150.

목적도 달성할 수 없었다. 9원칙이 제1항에서 '종합예산의 진정한 균형을 도모할 것', 제2항에서 '收稅計劃의 촉진'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철저히 도모하고 재정자금의 초과살포라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3항에서 금융긴축을 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금융면에서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4항의 임금안정, 제5항의 물가통제의 강화 등은 이와 같은 통화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수습대책을 측면에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9원칙의 특징은 외자도입에 의한 경제안정이라는 안이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일본 지배자의 희망과는 달리, 통화면에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수습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이를 통해 환율의 설정, 국제경제로의 연계의 회복을 일거에 달성시키려고 한 점에 있다.<sup>25)</sup>

### Ⅲ. 일본경제의 안정화 정책

#### 1. 덩지·라인의 성립과정

덩지가 9원칙의 실시를 맡아 일본에 부임하여 맥아더를 도와주라는 트루만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것은 9원칙 지령이 나온 다음 날인 1948년 12월 11일이었다. 시간적으로 보면 9원칙은 이미 미국의 국가의사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9원칙의 틀 안에서 총사령부의 재정고문이라는 조언자적 입장에서 그 실시만을 담당한 덩지의 역할은 단지 미 본국의 집행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9원칙의 형성과정에서 덩지의 견해가 비공식적이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9원칙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의 작성은 대부분이 덩지가 일본에 온 후 시작되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미 본국 관료기구의 전폭적인 지원체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덩지의 개성이 상당히 반영된 정책이 전개될 수 있었다.<sup>26)</sup> 따라서, 일본의 전후경제사에 하나의 획기를 이루는 덩지·라인의 평가는 많은 적든 은행가·재정가로의 덩지 자신의 개성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 9원칙의 실시책임자로 덩지만한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판명되었다.

그를 천거한 것은 제2차대전중에는 육군성에서, 전후에는 재 서독 美國軍政部에서 동료로 활동하던 트레이퍼 육군차관이었다. 특히 서독통화개혁의 성공으로 재정가로서의 덩지는 그 명성이 높아졌으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미국 중서부의 건실

25) 歴史學研究會 編 [28], p. 133.

26)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 409.

한 한 은행가로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경제인으로서의 덧지의 세계관, 행동방식은 이러한 배경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인 덧지는 1890년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인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보험회사의 서기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 미시간 주 은행검사관, 자동차 부품 회사의 매니저를 거쳐 1933년 디트로이트 은행(Detroit Bank & Trust) 총재에 취임하였다. 당시 이 은행은 전 미국에서 제82위에 있던 소규모 지방은행에 지나지 않았으나, 덧지의 지도하에 착실히 성장하여 1955년에는 제25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의 공적 생활은 1943년 육군성 가격조정국의 계약위원회 의장으로 군수생산의 지불평가에 관계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마침내 독일점령의 시작과 함께 군정부 재정부장으로 통화개혁, 은행개혁의 입안과 실시를 맡은 다음 1946년 6월 디트로이트 은행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오스트리아 평화조약의 위원으로 유럽에 파견되고 1947년에는 전미은행가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무성과 손을 잡고 인플레이션 억제, 저축증가운동을 전개하는 등 점차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깊이하였다.

경제인으로서의 덧지는 ‘古風의 정통은행가’(antediluvian orthodox banker)라든가 ‘고전적 자본주의의 신봉자’라고 평가되었다.<sup>27)</sup> 케인즈적 완전고용론과 리플레이션이론에 대한 이해는 없었으며, 특히 사회주의적인 경제통제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다. 독일 군정시대에 쓴 메모에서 덧지는 “현재의 세계적 동향은 사회주의의 확대와 소유권에 대한 국가통제에 있지만—결국 그것은 일종의 전체주의로 끝날 것이다—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기업의 최후거점이 되어 있으나 이 체제가 어느 정도 오래 지속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적 자유주의경제의 장래를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동시에 스스로 이 고전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덧지의 보수적 체질은 그를 확고한 건전재정주의자, 디플레이션주의자, 반공주의자로 만들었으며 맥아더, 드레이퍼,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의 신뢰를 얻는 한 요인이 되었다.

드레이퍼 육군차관이 처음에 덧지에게 일본행을 권유한 것은 1948년 봄 무렵이었는데, 그는 독일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전미은행가협회장으로 바쁘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드레이퍼는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9원칙을 기초하는 중에도 부하를 파견하여 덧지의 의견을 구하였다. 육군차관 보좌관이었던 링컨(G. A. Lincoln) 대령이 영 보고와 일본경제의 안정에 대해 덧지와 회견할 때의 메모에 의하면 덧지는 독일경제가 전전 수준의 70%를 넘은 반면 일

27)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 410.

본경제는 여전히 '35% 정도'에 머물고 있는 대조적인 사실에 주목하였다. 종전 이후 3년이나 지나고 있어 그만큼 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를 방지하면 "경제위기가 이제까지의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의 성과를 대부분 파탄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sup>28)</sup> 그리고 덧지가 계속 거절하면 9원칙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적 집단을 2~3개월 파견하여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하자, 그는 "누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이 계획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설 의향을 보였다.

이러한 예비적 대화 후 덧지는 막 재선된 트루만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2월 11일 백악관에서 로알 육군장관, 드레이퍼 차관 입회하에 정식으로 총사령부의 재정고문으로 일본에 부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트루만은 중국의 정치적 격동과 일본의 경제곤란은 미국정부에 있어 '최고의 관심사' (highest consideration)라는 점을 미리 말한 다음, 11월부터 12월에 걸쳐 NSC와 NAC에서 토의되어 결정된 새로운 대일본정책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대통령과의 회담 후 로알 육군장관은 더욱 덧지의 설득에 노력하여 방일시에는 육군장관이나 재무장관이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덧지는 대답을 유보하였다. 그가 확답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워싱턴의 신정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맥아더 아래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다. 드레이퍼도 덧지가 거절한다면 다른 책임자를 보낸다고 맥아더에게 알렸으나, 결국 덧지는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사단의 편성은 급속히 이루어져 재정학자 2명, 국무성·육군성·재무성에서 각 1명에 영 박사를 합쳐 7명의 일행이 로알 육군장관 일행과 함께 동경에 도착한 것은 1949년 2월 1일이었다. 이는 9원칙 지령이 나온 6주 후이고, 일본에서 민주자유당이 대승을 거둔 총선거 1주일 후였다. 덧지 일행은 2월 9일에는 오오야 신조오(大屋晉三) 장상과 10일에는 요시다 수상과 회담하였지만 본격적인 질청은 16일에 제3차 요시다 내각이 성립하고 이께다가 장상에 임명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그 사이 덧지 일행은 경제과학국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일본경제의 분석과 토의에 열중하였다.

한편, 덧지 일행을 맞이한 총사령부의 공기는 미묘하였다. 12월 17일 총사령부는 9원칙 명령이 일본정부에 전달된 사실을 발표한 후 "이와 같은 계획이 필요한 것은 맥아더 원수도 ……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달 19일 맥아더로부터 요시다에게 보낸 편지는 "이 요구가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 또 개개 국민의 희생이 얼마나 클 것인가, ……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망할 것이다"라고 선고하고 표면적으로는 워싱턴과 하나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9원칙 명

28) 大藏省財政史室 編 [14], pp. 737~739.

령은 총사령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총사령부가 인플레이션의 조절에 무능무책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과 같았다”라는 경제과학국의 한 관계자의 감상이 그 상황을 거짓없이 전해 주고 있다.<sup>29)</sup> 하지만 당시 총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코헨(T. Cohen)에 의하면 덩치는 총사령부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 매쿼트 국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국장 주위의 소그룹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였다고 한다.<sup>30)</sup>

이즈음 총사령부와 일본정부, 야당은 공무원급여의 새로운 기준설정에 대하여 격렬한 공방을 전개하고 있어 9원칙을 검토할 겨를이 없었다. 임금수준의 안정은 9원칙 가운데 중요항목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는 12월 15일 요시다 수상과의 면담에서 대장성이 주장하고 財政課도 승인한 5,300엔 案을 거부하고, 民政局과 人事院이 추천한 6,300엔 案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어수선했던 분위기 속에서 급히 경제과학국의 각 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된 코멘트는 9원칙에 대한 반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1948년 7월 10원칙을 발표할 때부터 총사령부의 경제정책은 재정, 노동, 물가배급 3과의 합의로 추진되었지만 해플러 노동과장은 12월 17일의 메모에서 다음 해 2월 1일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안정화 계획이 진행중이고 9원칙이 나왔다고 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특히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임금 3원칙의 한도를 넘어 직접통제(동결)와 스트라이크권, 단체교섭권의 제한에까지 이르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勞動課는 9원칙이 철저히 실시되는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희생이 강요되어 그 반발로 노동운동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였다.<sup>31)</sup>

또한, 경제계획 전반의 책임자였던 화인(S. M. Fine) 박사는 9원칙 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워싱턴의 호출을 받아 드레이퍼로부터 총사령부를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3월 6일자 “인플레이션인가 안정인가”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1948년중에 인플레이션은 공업생산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불가결한 크레디트의 팽창이 주요 원인이었고 …… 개선의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언제나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탈리아경제를 예로 들어 “경제안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목표는 공업생산수준과 국민소득의 상승에 있다”고 반론하였다.<sup>32)</sup>

이러한 총사령부 내의 가라앉은 분위기는 일본정부에도 전달되었다. 리드(E. M. Reed) 재정과장은 와타나베 다케시(渡邊武) 대장성 섭외부장에게 9원칙에

29)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 414.

30) Cohen [3], p. 431.

31) 大藏省財政史室 編 [14], pp. 746~747.

32) 大藏省財政史室 編 [14], p. 760.

대한 구체안은 일본측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부는 원칙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암암리에 9원칙의 실시에 열의가 없다는 것을 발설하였다. 더구나 와타나베는 각 방면으로부터의 정보를 수집하여 덧지는 “냉정한 합리주의자이자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이고”, 워싱턴으로부터는 “경제과학국 같은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경질하여도 상관없다는 언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내었다. 와타나베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즉시 안정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던 대장성에는 이러한 덧지의 평판과 역할에는 오히려 호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정부나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9원칙의 준수를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총사령부의 저항으로 종래 그대로의 중간안정노선이 계속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균형재정이라고 불리는 덧지·라인하에서 요시다 내각은 앞서 말한 선거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2. 종합균형예산의 성립

1949년 2월의 전반을 일본경제의 현상분석에 집중하던 덧지 일행은 그 결과에 기초하여 우선 2월 23일에 일본정부가 사령부에 제출한 1949년도 예산안을 다시 짜기 시작하였다.<sup>33)</sup> 덧지는 이께다 장상과의 회담에서 인플레이션의 수습책으로 ① 소련식의 물가통제, ② 독일에서 실시한 통화절하, ③ 균형재정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③의 방법을 채택하고 싶다고 말하고, 일부에서 걱정해 온 엔화의 평가절하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덧지는 자신의 경제안정구상을 1949년 3월 7일 신문에 발표된 성명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진정한 안정과 발전은 국민이 당면하는 제 문제를 건전한 방법으로 재정 통화의 면에서 다루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효과적인 안정화에 필요한 것은 모든 정책결정을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인 정부예산과 연결하는 데 있다. 인플레이션의 마개를 여는 것도 정부이고 그것을 막는 것도 정부이다. 인플레이션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 근원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는 모든 경제적·정치적 결정이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와 경제상 필요한 생산과 직접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국고보조금·투자 및 기타 일반적인 경비항목에서 그 지출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지출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고

33) 大藏省財政史室 編 [11], pp. 393 ~ 395.



<표 2> 덂지예산(1 일반회계)

(단위 : 100만 엔)

항 목	정부안	GHQ안	증 감	항 목	정부안	GHQ안	증 감
세 입				정 부 출 자 금	40,263	69,853	29,589
조세및인지수입	412,295	514,600	102,305	復 金	40,000	33,000	7,000
소 득 세	228,600	310,000	81,400	공 단	0	6,987	6,947
주 세	59,910	65,000	5,090	인 쇄 국	0	800	800
거 래 고 세	0	45,100	45,100	金 資 金	0	2,633	2,633
어 음 세 ·	29,000	0	△ 29,000	폐 쇄 기 관	0	10	10
생 산 세 등				정 리 위 원 회			
기 타	94,785	94,500	△ 285	국 민 금 용 금 고	0	1,300	1,300
특별회계로부터	(119,492)	134,860	15,268	무 역 자 금	0	25,000 <sup>a)</sup>	25,000
의 수납				帝 國 鐵 道 其 他	263	163	100
전 매 익 금	115,000	120,000	5,000	雜 費 쇄 기 관			
기 타	(4,492)	14,860	10,368	특 별 회 계	3,740	12,016	8,276
재 산 세		2,683	---	적 자 이 율			
알 콜	1,558	1,017	---	전 매 국 (소 금)	0	3,700	3,700
경 마		2,010	---	예 금 부	3,740	3,467	273
復 金		8,528	---	농 업 공 제	0	845	845
부 정 소 유		114	---	식 량 관 리	0	2,095	2,095
물 자				개 척 자 자 금	0	1,909	1,909
기 타		507	---	공 단 적 자 이 율	0	3,140	3,140
관 업 수 입	6,124	5,868	△ 274	식 량	0	839	839
관 유 재산 수 입	2,718	4,624	1,906	석 유	0	674	674
잡 수 입	(28,402)	40,435	12,033	주 류	0	96	96
전년도 잉여금	3,040	3,085	45	配 炭	0	248	248
계	572,089	703,472	131,383	비 료	0	352	352
세 출				가 격 조 정	0	900	900
종 전 처 리 비	110,000	125,258	15,258	산 업 부 흥	0	28	900
1949년도분		107,815		선	0	3	3
1948년이월		17,443		선 박 운 영 회 보 조	5,000	6,267	1,267
배 상 시 설 처 리 비	9,000	2,656	△ 6,344	가 격 조 정 비	70,000	198,700	128,700
연 합 국 재 산	2,690	1,709	△ 981	安 定 帶 分	70,000	100,400	30,400
반 환 비				이 율 분	0	15,000	15,000
공 공 사 업 비	75,000	50,000	△ 25,000	수 입 물 자	0	83,300	83,300
실 업 대 책 비	15,000	0	△ 15,000	보 급 금	0		
지 방 배 부 세	71,004	57,700	△ 13,304	職 員 宿 舍 費	0	500 <sup>b)</sup>	500
배 부 금				解 除 物 件 處 理 費	0	149	149
국 채 비	13,864	13,637	△ 228	기 타	159,610	161,466 <sup>c)</sup>	1,856
				예 비 비	3,000	0	3,000
				계	578,171	703,049	124,878
				(세입초과)		(423)	

주: 1. 100만 엔 이상은 반올림. 원자료의 오기는 영문자료를 보고 정정하였다.

2. 나중에 a)는 150억 엔 증액되어 400억 엔으로, b)는 6억 엔 증가되어 11억 엔으로, c)는 156억 엔 감액되어 1,458억 엔으로 정정되었다.

자료: 大藏省財政史室 編 [11], p. 401. 원 자료는 「昭和24년도총예산안」, 1949. 3. 22(대장성자료 Z501-28).

〈표 3〉 덧지예산(2 일반회계)

(단위 : 100만 엔)

회 계 명	세 입	세 출	세 입과부족
외국무역특별엔자금	278	0	278
조 폐 국	3,077	1,899	1,178
인 쇄 국	5,828	5,828	0
전 매 국 (연초)	158,400	38,400	120,000
(소급)	15,599	19,299	△ 3,700
(權腦)	807	727	80
대 장 성 예 금 부	6,645	10,111	△ 3,467
金 자 금	1,095	3,228	△ 2,133
재 산 세 등 수 입 금	6,911	2,854	4,057
후 생 보 험	21,033	10,299	10,734
선 원 보 험	1,451	912	540
간 이 보 험	24,310	11,118	13,193
우 편 연 금	975	338	636
노동자재해보상보험	4,847	4,847	0
실 업 보 험	12,467	6,303	6,164
삼 립 화 재 보 험	44	44	0
어 선 재 보 험	284	284	0
농 업 공 제 재보험	3,928	4,773	△ 845
식 량 관 리	439,381	441,476	△ 2,095
薪 炭 수 금 조 절	28,876	28,876	0
알 꼴 전 매 사 업	5,571	4,554	1017
자작농창설특별조치	2,542	1,512	1030
개 척 자 자 금 용 통	268	2,178	△ 1909
국 유 입 야 사 업	12,842	12,842	0
國 營 競 馬	6,923	4,912	2011
부정보유물자등특별조치	1,126	1,365	△ 238
국 유 철 도 사 업	130,203	130,203	0
전 기 통 신 사 업	42,408	42,408	0
우 정 사 업	37,185	37,185	0
무 역	435,676	417,864	17,812
합 계	1,410,979	1,246,639	164,340

주: 세입은 보전금을 포함하지 않고, 세출은 차입금상환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 〈표 2〉와 같다.

부적당한 정책결정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다. 정부지출은 징세가능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에만 한정해야 한다. 감세는 정부지출 삭감의 결과로만 얻을 수 있다”<sup>34)</sup>

34) 大藏省財政史室 編 [13], p. 38.

〈표 4〉 덧지예산(3 정부관계기관)

(단위 : 100만 엔)

기 관 명	세 입	세 출	세 입 과 부 족
公 團			
식 량 배 급	343,858	344,697	△ 839
식 료 품 배 급	89,251	89,251	0
사 료 배 급	5,255	5,255	0
油 糧 배 급	31,648	31,648	0
配 炭	150,020	150,268	△ 248
석 유 배 급	5,540	6,241	△ 674
주 류 배 급	78,136	78,232	△ 96
비 료 배 급	46,774	47,126	△ 352
가 격 조 정	130,598	131,498	△ 900
산 업 부 흥	2,670	2,698	△ 28
선 박	8,534	8,537	△ 3
식 량 무 역	5,849	5,849	0
광 공 품 무 역	125,639	125,639	0
섬 유 무 역	128,155	128,155	0
원 재 료 무 역	3,393	3,393	0
소 계	1,155,319	1,158,459	△ 3,140
기 타 정 부 관 계 기 관			
부 흥 금 융 금 고	64,107	55,579	8,528
지 주 회 사 정 리 위 원 회	272	272	0
폐 쇄 기 관 정 리 위 원 회	310	310	0
중 권 처 리 조 정 위 원 회	101	101	0
국 민 금 융 금 고	1,862	589	1,237
선 박 운 영 회	19,841	26,107	△ 6,267
소 계	86,493	82,959	3,535
합 계	1,241,812	1,241,417	395

자료: 〈표 2〉와 같다.

이와 같은 덧지의 구상은 우선 1949년도 종합균형예산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긴축재정을 축으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은 9원칙의 첫 항목에 나타나 있지만, '균형재정'이라는 말 자체는 오랫동안 총사령부의 재정담당관과 대장성 사이에서는 자주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실제로 패전 이래 각 연도의 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는 적자였으나, 재정법의 규정과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일반회계에서는 형식상 균형이 유지되었다. 점령경비인 '중권처리비'가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여러 번의 일본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되지 않는 사정도 총사령부가 일반, 특별 두 회계등을 합친 종합예산

〈표 5〉 덧지예산 (총괄표)

(단위 : 100만 엔)

항 목	세 입	세 출	세 입 과부 족
일 반 회 계	703,472	703,049	423
특 별 회 계	1,410,979	1,246,639	164,340
정 부 관 계 기 관	1,241,979	1,241,417	395
계	3,356,263	3,191,105	165,158
일반회계로부터의 적자보전	21,423		21,423
일반회계의 이월 합 계	3,337,686	134,860	△134,860
대 일 원 조 물 자	175,000	175,000	0
총 계	3,552,686	3,500,965	51,721
적 립 금 이 월			△ 32,444 <sup>2)</sup>
국채차입금 상환 <sup>1)</sup>			△ 18,677 <sup>3)</sup>
순 잉 여			600

주: 1) 일반회계의 국채상환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조폐국 1,177, 원생보험 10,733, 선원보험 539, 간이보험 13,192, 실업보험 6,164.

3) 재산세 1,373, 자작농 1,030, 무역 15,000, 國民公庫 1,273.

자료: 〈표 2〉와 같다.

의 균형에 강하게 집착한 하나의 이유였다. 또한, 경제과학국 財政課는 빈번한 추가경정예산(1947년도에는 15회에 달함)의 심사에 분망하여 특히 물가와 임금의 끊임없는 상승분을 보충하기 위한 재정조작으로 하루 온종일을 보내는 상황이었다. 일반회계의 형식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회생은 특별회계등을 통한 공채, 차입금의 증대로 메꾸어 나갔다. 1948년도에는 부흥금융채권(부흥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채무의 순증가가 1,000억 엔을 넘어 그것이 곧바로 일본은행권의 증발을 가져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sup>35)</sup>

수 차례에 걸친 덧지·이께다 회담을 거쳐 3월 22일에 일본정부에 제시된 재편성 예산안은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 정부관계 제 기관, 지방공공단체에 걸친 예산 항목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숨어 있던 채무와 보조금을 밝혀냄으로써 명실공히 '종합예산의 진정한 균형'(true balance in consolidated budget)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작성되었다.<sup>36)</sup> 그 개요는 〈표 2〉~〈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덧지예산안을 '종합균형'이라 부르는 까닭은 단지 재정 전체의 균형에 머무르지 않고 순계로 1,500억 엔에 달하는 흑자를 계상하여 그 대부분을 부흥채등 채무상환에 돌렸기

35) 吉野俊彦 [26], p. 27.

36) 歴史學研究會 編 [28], p. 134.

때문이다.

그 결과 예산규모는 일본정부 원안에 비하여 약 20% 늘어났고 확대된 세출은 조세수입으로 조달하는 한편 공공사업비와 실업대책비로의 지출은 삭감되었다. 가격조정비로 계상되어 있는 각종 보조금은 반대로 총액에서는 3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이것은 무역회계등에 '숨어 있던 보조금'이 공개되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며 단일환율 설정을 전제로 수출보조금은 전부 중단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의 합리화를 국민은 내핍생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합균형예산이 목표로 한 국내수요를 줄이고 생산의 증가분을 수출로 향하게 한다는 구상은 세계경제의 후퇴에 직면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자금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국민생활도 증세의 압박 외에 기업합리화에 따른 실업증가, 임금체불·미불 등이 더하여져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37)</sup>

반면에 종합균형예산은 채무상환으로 은행용자력을 강화시켰으며, 對充資金<sup>38)</sup>會計로부터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은행이 재정자금의 우선 확보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자금력이 훨씬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부용자와 가격보조금 방식에서 은행자방식으로 이행한 것은 자본집중과 합리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이것은 동시에 미국자본이 일본독점자본을 지배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달러 지배로 상징되는 금융적 지배야말로 일본독점자본의 대미 종속화의 요체이고, 대 달러 단일환율의 확립은 그 체제화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대충자금 특별회계는 종합균형예산이 가져온 디플레이션 속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기의 대충자금은 주로 채무상환의 형태로 그 자체 종합균형예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은행자본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점차 중화학공업의 기초부문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중이 늘어나 금융정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점령정책의 추진을 좌우하게 되었다.<sup>39)</sup>

덩치는 이제다 장상에게 예산안을 內示하면서 “이것은 완전한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예산이다”<sup>40)</sup>라고 규정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어 安定恐慌이 찾아올

37) 經濟企劃廳 戰後經濟史編纂室 編 [19], p. 99.

38) 이 제도는 援助受入國이 원조물자를 국내에서 매각한 대금을 각국 통화로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의 이용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즉, 원조자금의 용도를 미국정부가 감독하는 데에 이 제도의 목적이 있었다. 대충자금의 용도는 ① 생산적인 투자, 또는 ② 정부채무상환의 목적에 한정되고, 비생산적인 용도와 재정적자의 보전은 금지되었다.

39) 鈴木武雄 [20], p. 276.

40) 大藏省財政史室 編 [11], p. 388.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만큼 덧지는 ‘평판이 나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미리 미 본국과 맥아더의 승인을 얻은 후 상당한 결의와 자신감을 가지고 단행하였던 것이고, 총사령부 관리와 일본정부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완강한 자세를 취하였다.

일본측의 절충력을 담당하였던 이께다 장상은 재정가로서는 덧지의 경제철학이 “근본적으로는 자유당이 내건 정책과 일치한다”고 느끼면서 이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여당의 신인 정치가로서는 선거공약과의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일시적으로는 사직까지도 고려할 정도였다.<sup>41)</sup> 특히 소득세의 감세, 거래세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덧지예산은 오히려 징세 강화가 추구되어 담세율은 전년도보다 50% 늘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요시다 수상은 덧지의 이께다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을 보고 사임을 만류하는 한편 안본과 당내, 재계의 불만을 진정시켰다. 이후 이께다 장상은 3월 24일, 25일, 28일 3회에 걸쳐 덧지와 만나 주로 감세를 허락받기 위해 교섭하였다.<sup>42)</sup> 하지만 덧지는 ① 소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싶다, ② 샤우프(C. S. Shoup)稅制조사단<sup>43)</sup>의 방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세계개정은 그 후에 한다, ③ 미일 쌍방의 요구를 억제하면서 타결된 것 중 어느 한 가지를 바꾸면 다른 요구가 돌출한다, ④ 모든 양보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일본정부는 거의 수정 없이 덧지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덧지예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일본정부 내부에 있었던 것처럼 사령부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과학국 관리들은 공동토의 자리에서 덧지 일행과 격론을 거듭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3월 14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공무원의 30%를 행정정리로 삭감하자는 원안에 대하여 화인과 해플러는 크게 반대하였다. 해플러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억누를 수는 없다”고 하자 덧지는 “이제까지는 지나치게 높았다”고 응수하여 중간에 낀 매쿼트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맥아더는 덧지와 경제과학국의 논쟁으로부터 초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요시다 수상처럼 일찍부터 덧지에게 말기자는 생각을 내심 품고 있었다. 덧지도 사령부 관리들의 자신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맥아더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종합균형예산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41) 大藏省財政史室 編 [11], p. 406.

42) 大藏省財政史室 編 [14], pp. 764~768.

43) 1949년 5월 일본의 항구적인 조세제도를 세우기 위해 일본에 온 컬럼비아 대학 교수 샤우프를 단장으로 한 7명의 세계사절단. 덧지·라인하에서 강행되고 있는 자본축적을 세계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구제안을 작성하기 위해 상세하게 현지조사를 하였다(후지와라 아키라 외, 노길호 해설·옮김 [1], pp. 90~91).

대일원조를 중단한다는 위협을 배경으로 '리드 재정과장이 대장성을, 사령부의 각국이 각 뿔을 누르는' 모습으로 수습되었다. 이후 문제의 초점은 덩치·라인이 가져올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으로 이행되었다.

덩치는 예산을 내시하면서 "이 예산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평하게 불만을 살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으나 행정정리, 조세부담의 증가, 생계비 상승, 공공사업비, 실업대책비의 감축 등으로 인한 내핍생활의 증가는 일반 노동자, 중소기업, 저소득계층 등에 집중되었다. 이미 전년도부터 강화되고 있던 임금인상 억제정책으로 노동운동은 격화되고 있고 사령부의 노동과는 "1949년도 예산은…… 너무 가혹하여 위험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반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하지만 戰前期에 비하여 '121%의 고용에 40%의 생산수준'밖에 달하지 않은 낮은 노동생산성에 주목한 덩치는 그것이 사령부의 노동정책이 너무 후해서 생긴 것이라 판단하여 어느 정도의 실업 증가는 건전하다는 태도를 가졌으며, 실업대책비의 부활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덩치의 생각을 반영하여 덩치·라인하에서의 사령부의 노동정책은 경직되고, 파업에 대한 점령군의 개입이 시작되어<sup>44)</sup> 전후 노동운동을 급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3. 단일환율의 결정

앞에서 본 것처럼 9원칙에서 단일환율을 하루 빨리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총사령부나 일본정부도 영 사절단에 의해 구체적인 환율수준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종래와 같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복수환율제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여기서 영 사절단의 권고(270~330엔)를 기초로 한 바람직한 환율의 산정과 몇 개의 가정수준에 대응한 영향도 및 그 대책을 포함한 검토작업이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안본을 중심으로 K작업, R작업, Z작업을 추진하여<sup>45)</sup> 1949년 1월에는 각료 수준에서의 단일환율설정대책 심의회를 열어 심의를 거듭하였다.

전후의 무역거래는 물자별로 소위 복수환율제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격차를 각종 보조금으로 커버하고 있었다. 이 보조금이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되어 덩치에 의해 폐지된 것이다. 단일환율 설정과 보조금 폐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전 이후 1948년까지의 무역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

44) 神田文人 [17], pp. 281~282.

45) 有澤廣巳·稻葉秀三 編 [5], pp. 77.

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sup>46)</sup>

이 시기의 일본무역은 일본정부가 관리하는 엔화 표시 무역특별회계와 총사령부가 관리하는 달러 표시 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어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국내의 공정가격으로 엔을 무역특별회계에 지불하였다. 한편, 총사령부는 해외시장에서 국제가격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달러 표시 계정에서 달러를 지불하였다.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가 무역특별회계에서 국내공정가격 기준으로 엔을 지불받고, 해외에서 지불된 달러는 총사령부의 달러 표시 계정에서 수취하였다. 따라서, 엔화 표시 거래와 달러 표시 거래가 분리되어 있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환율은 없었다. 엔과 달러의 환율은 사후적으로 개개의 거래마다 결정되었다. 수출·수입 각각의 평균환산율을 보면 수출은 수입보다 훨씬 낮은 엔화 환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수출품을 더 비싸게 팔고, 수입품은 더 싸게 구입하는 것이었던 만큼 일본국민에게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과 같았다. 실제로 1948년 말 평균환율은 수출 1달러 = 340엔, 수입은 1달러 = 160엔 정도로 개별물자에 의해 370엔에서 600엔까지 폭이 있었다(<표 6> 참조).

무역자금 특별회계(円 계정)는 무역청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수출과 수입에서 발생하는 차손을 外貨를 관리하는 총사령부 계정을 통하여 부담하고 있었다. 그 적자는 원가 '제로' (뒤에 반제의무가 확정되었지만)의 원조물자를 공정가격으로 불하하여 얻은 엔화로 마음대로 메꾸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은 일본은행에서 차입하여 충당하였다. 그 결과 1948년도 말 대총자금 특별회계를 분리할 때 마감된 무역자금 특별회계의 누적결손은 3,735억 엔에 달하였다.<sup>47)</sup>

K~Z 작업은 1달러 = 300~400엔 사이에서 단일환율을 3~4개 가정하고 시산하였는데 산업별 실태조사가 가미되었다고는 하지만, 탁상행정으로는 보조금의 증감을 예상한 복잡한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결론은 언제나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 K작업에서는 1달러 = 400엔으로 하여도 수출의 35~45%가 채산불능이 되고, 수입품의 엔가격은 2~4배 상승하여, 임금을 40%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성의 연구에서는 1달러 = 300엔의 경우에 수입품의 엔가격은 2~4배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적정환율의 산정도 고립경제이기 때문에 엔의 실세측정이 어렵고, 미일의 구매력 比價, 생계비 비가, 임금 비가는 277~393엔에 미쳤으며 특히 공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기술적 처리가 난점이었다.

46) 岡崎哲二·吉川洋 [15], p. 81.

47) 大藏省財政史室編 [10], p. 427.



〈표 6〉 수출입품의 엔달러 비율 (1949년 1월 현재)

수출품	대 1달러	수입품	대 1달러
섬유 및 제품		면화국내용	80
면 직물	250~420	면화수출용	250
생사	420	사탕	177
견 직물	315	소맥	165
모 직물	350	중유	284
면사	250	소금	103
도자기	600	석탄	178~267
강선	500	양모	120~140
완구	500	생고무	154
시멘트	320	철광석	125
통조림	300	화학제품	200~350
차전거	330	인광석	154
비료	510	선철	67
판유리	390	콩깻묵	37
미싱	600		
棒鋼	415		
	240		

자료: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 427, 원자료는 물가청, 「물가통제자료집」, 제1집, 통산산업성, 「日本貿易の展開」, 1956.

그러나 1949년 1월에 들어 빈번하게 열린 단일환율설정 대책위원회<sup>48)</sup>에서는 수입보조금과 일부의 수출보조금을 잠정적으로 남기면 生絲를 제외한 수출주력품의 섬유는 1달러 = 350엔으로 채산이 맞고 전체의 80%가 살아남는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연말에 지배적이었던 300엔보다 50엔, 사령부가 1949년도 예산편성에서 총합산 기초로 가정한 330엔보다 20엔 쯤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측에서는 환율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경제과학국의 분위기도 여전히 유동적이었다. 당시 경제과학국에는 대규모의 환율산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수출품의 주력인 섬유에 대한 배려에서 400엔 전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2월 중순까지는 일부의 수입보조금을 동반한 330엔의 단일환율 채용이 단행될 분위기였다.

한편, 덩치는 3월 7일 제1회 기자회견에서 '수입을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고 수출을 자극하는 환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설정된 뒤에 그 환

48) 1948년 12월 내각에 설치되어 제1차모임이 12월 30일에 열렸으며, 2회는 1949년 1월 4일에 열린 이래 1월중에 6회의 회의가 계속될 정도로 긴박함을 보여 주었다. 이 회의는 총리대신 이하 관계 각료, 일본은행 총재, 민간, 학계 각 위원으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심의회였으며 1949년 3월경에는 350엔 정도의 환율을 실시한다는 대강의 안을 내놓고 있었다(大藏省財政史室 編 [12], p. 365).

율을 유지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상하로 크게 변동하는 환율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덧붙이는 일본정부와는 특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1달러 = 330엔의 단일환율을 채용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맥아더의 이름으로 미 본국의 승인을 구하였다. 이 때가 3월 23일경이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총사령부는 덧붙이의 승인을 얻어 상업, 환거래, 군용을 포함한 1달러 = 330엔(상하 10% 이내의 변동을 사령부의 권한으로 유보한다)의 단일환율을 4월 1일 이후 발효시킬 것을 요청한다.
- ② 수출보조금은 폐지하지만 수입보조금은 전년도의 약 반액의 수준에서 남기고 그 가운데 63%는 식량, 비료로 나머지는 코크스, 선철, 철광석 등의 수입에 충당한다.
- ③ 대충자금 설정한다.
- ④ 이 신환율하에서는 1948년 12월을 기초로 전 수출의 80%가 채산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합리화 노력이 요청된다.

맥퀴트는 예산, 대충자금 그리고 환율을 갖추고 새해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심리적·정치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미 본국으로부터 곧바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미 본국은 덧붙이가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up>49)</sup>

NAC는 3월 25일 간부회의에서 총사령부안을 검토한 결과를 29일 NAC회의에 제출하였다. 간부회의는 총사령부가 330엔을 권고한 산출근거는 보여 주지 않았지만 영 권고 이후의 인플레이션 진행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입수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생각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과대평가는 총사령부가 '가까운 장래에 대외무역목적의 변경을 달성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총사령부는 330엔 이상의 환율은 현행 물가·임금체계를 혼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의한 조절이 가능하고 10%의 허용폭도 있기 때문에 330~360엔 사이에서 변경하는 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권고를 받은 NAC 회의는 간부회의의 원안을 그대로 승인하여 'NAC는 1달러 = 330엔의 권고를 승인할 용의가 있지만', 그것을 360엔으로 변경하는 것을 '총사령부가 고려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장래 환율의 어떠한 변경도 NAC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총사령부는 1949년 4월 23일자로 '일본 엔에 대한 공식환율의 수립'(Establish-

49) 大藏省財政史室 編 [10], p. 430.

ment of Official Exchange Rate for Japanese Yen)의 각서를 발표하고 '4월 25일 오전 0시부터 1달러에 대해 360엔의 공식환율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령하였다.<sup>50)</sup> 이는 NAC의 결정 후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처럼 시간이 걸린 이유는 330엔으로 편성되었던 1949년도 예산을 신환율로 재편성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360엔 환율은 그 이후 22년간 한 번의平價변경없이 유지되다가 1971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1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국간 통화조정에 따라 308엔으로 절상되었다. 그 사이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제수지면에서도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유지에 공헌하여 일본경제의 대내적·대외적 균형달성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sup>51)</sup>

#### IV. 안정공황하의 일본경제

일본은 덩치·라인하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수습되고 단일환율이 설정됨으로써 국제경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덩치·라인의 강행으로 일본경제는 일시적이지만 불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덩치의 긴축정책으로 금융이 급격히 경색되었다. 이미 1949년 1~3월에는 엄격한 징세로 인해 금융이 긴축되고 기업이 자금난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타격을 가하는 형태가 되었다. 194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에 비해 2,500억 엔이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조세수입은 1,680억 엔이 증가하였다. 세출도 약 2,400억 엔 증가하였지만 여기에는 658억 엔의 채무상환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출은 이를 훨씬 밑돌았다. 이에 따라 국고의 대 민간수지는 213억 엔의 지불초과에서 373억 엔의 受入초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민간의 자금경색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부금의 대출이 정지된 후 기업금융은 전국의 은행이 담당하게 되었으나 은행의 자금력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일본은행은 공개시장조작과 대출을 과감히 추진하여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고가 민간으로부터 흡수한 자금을 상당하는 금액을 민간에게로 환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불황의 심화를 막기 위하여 대장성과 일본은행이 총사령부의 양해를 얻어 소위 '금융완화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대출증가는 시중금융기관의 오버·론을 늘렸으며 공개시장조작의 성행은 시중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을 악화시켰다. 이는 시중금융

50) 有澤廣巳·稻葉秀三 編 [5], p. 78.

51) 大藏省財政史室 編 [12], p. 366.

기관의 보유국채, 채권액의 감소와 맞물려 일은의 '금융완화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sup>52)</sup>

덧지의 긴축정책은 생산활동에도 제약을 가하였다. 생산의 정체가 가장 심한 부문은 기계공업이었다. 덧지·라인은 두 가지 면에서 기계공업에 타격을 주었다. 우선 전후 군수산업으로의 축적(인적 자원과 잔존 설비·자재)을 활용하여 값싼 경량의 내구소비재 기계류 등의 생산으로 일제히 진출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수요의 정체와 축소에 직면하여 도산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라디오였다. 라디오 생산은 1948년 81만 대에 달하였으나 1949년 61만 대, 1959년에는 29만 대로 떨어졌다. 1947년에는 라디오 제조업체가 86사였으나 1950년에는 18사로 감소하였다. 또 하나는 부흥금융금고의 용자등에 뒷받침되어 급증한 설비투자에 대응하여 성장한 산업용 기계 생산이 부흥금융금고용자의 정지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점이다. 덧지·라인의 실시 후에 나타난 전반적 수요저하는 설비투자를 감소시켜 기계수요도 줄었다. 예를 들어, 탄광기계등은 직접적으로 부흥금융금고용자 정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계의 생산대수도 1949년의 7만 4,000대에서 1950년 4만 8,000대로 격감하였다. 또한, 전전 기계공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병기생산은 점령하에서 연구·개발·생산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는 특히 항공기 공업의 발전을 오랫동안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sup>53)</sup>

이처럼 일부 산업부문에서 타격을 심하게 받았지만 제조공업 전체의 생산지수는 1949년에는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다. 광공업생산지수(1934~1936년 기준)는 1949년 1월 66.3에서 7월의 75.0, 12월의 87.2, 1950년 6월의 98.0으로 증가하였다. 본래 출발점의 수준이 전전의 3분의 2라는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락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후설비를 혹사하면서 노동강화의 방법으로 대책없이 증산만을 도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제품단가당 생산비의 상대적 저하가 달성되었으며, 인원정리·임금인하·하청가공임금의 하락에 노력하면서 당면과제인 채산유지는 가능하였다. 당시 보통 이와 같은 생산의 상황을 '장님생산'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기업합리화·비용절감 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기업측에서는 제품판매예상이 충분하지 않아도 조업도를 상승시켜 비용절감에 노력하는 것을 가리켰다.<sup>54)</sup> 조업도의 상승과 파잉노동의 정리로 종업원 1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은 당연히 향상되었다.

9원칙은 디플레이션정책이 가져오는 재정면에 대한 영향은 금융완화책을 준비

52) 經濟企劃廳 戰後經濟史編纂室 編 [19], p. 106.

53) 宮崎正康·伊藤修 [22], p. 188.

54) 樺西光速 外編 [16], pp. 1603~1604.

〈표 7〉 주요물자의 수요추정

항 목	생산계획	생산전망	수 요
보 통 강 강 재	1,800	1,800	1,676
알 루 미 늬	25	18	14
구 리	65	60	52
시 멘 트	2,800	3,200	3,300
유 안	1,120	1,120	-
석 회 질 소	290	310	1,900
가 성 소 다	140	135	128
염 료	9,000	6,000	4,000
면 사	347	321	311
인 건 스프	137	122	94

주: 염료는 톤, 면사와 인건스프는 100만 파운드 나머지는 1,000톤.

자료: 經濟企劃廳 戰後經濟史編纂室 編 [18], p. 272.

하여 생산의 상승을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수준도 현상태를 유지시키고, 국내구매력을 억제하여 수출을 늘리려고 하였다. 이 사이에 단일환율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업은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생산비 절하를 위한 증산에 노력한 결과 생산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상승하였다. 하지만 수출이 전년에 비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해외사정의 변화로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sup>55)</sup> 더구나 국내구매력은 1949년도의 종합균형예산에 의해 억압되었기 때문에 채화가 격증하여 滯貨融資가 필요하게 되었다.

채화의 증가에 대해 안본에서는 1949년 8월 30일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1949년도의 수요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요가 생산계획보다 모자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해외상황의 악화에 의한 것 : 석유, 염료, 알루미늄 등
- ② 예산삭감에 의한 것 : 차량, 통신기계, 전선 등
- ③ 생산활동 부진에 의한 것 : 석탄, 강재, 가성소다 등

또한, 통산성이 조사한 생산자, 公團, 취급업자의 1949년 말 현재 주요 물자 40품목의 재고총액은 763억 7,000만 엔이었다. 이 재고 가운데 어느 만큼이 異常在

55) 가장 큰 원인은 영국의 파운드화 절하였다. 엔환율 결정 6개월 뒤에 영국이 파운드를 30.5% 절하하였다. 당시 일본 수출은 절반이 파운드권으로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하락은 파운드화 절하만큼 그 효과가 줄어들었다.

庫였고, 생산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일본산업협의회는 1949년 각 월말에 주요 산업의 공장재고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9~12월의 경우 재고증가율이 심하고 또 생산에 대한 재고율이 높아 이상재고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코크스, 電氣鉛, 광학기계, 가성소다, 석탄, 알루미늄, 地金, 소형전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재고증가율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산에 대한 재고율이 비교적 높고, 재고압박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電氣銅, 전해소다, 絹紡絲, 「스프」(staple fiber)絲, 「스프」직물, 아마직물, 錫, 고무제품, 가죽, 생사, 합성염료, 인건사 등을 들고 있다.<sup>56)</sup>

이와 같은 재고증가에 대하여 통산성에서는 8월 13일 종합처리책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섬유품의 국내방출이 이루어졌다. 1950년 2월 7일 총사령부는 안본에 대하여 정부, 공단 수종의 체화처리방침에 대한 각서를 내어 3월 15일까지는 이들 滯貨表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안본은 이에 따라 정부기관 보유재고장부 가격을 761억 2400만 엔, 시가 719억 3100만 엔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300~400억 엔을 체화로 보고 면포등 재해구조용의 비축, 구리, 아연 등 일정량 이상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 「스프」 등 장래산업부흥에 필요한 것, 생사등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리하도록 하였다.

덧지공황하에서 노동자의 생활도 저하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눈에 띄게 악화된 것은 아니었고 불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태였다.

총리국 통계국이 조사한 월평균 현금급여총액을 보면, 예를 들어 공업종사자의 경우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쳐 평균 4,369엔에서 8,416엔으로 약 1.9배가 된 데 대하여, 1949년부터 1950년에 걸쳐서는 8,416엔에서 8,627엔으로 겨우 2.5%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명목임금의 상승은 억제되었으나 소비자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계속 증가하였다. 총리국 통계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1950년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7.2% 저하하였기 때문에 명목임금의 상승은 2.5%에 불과하였으나 실질임금의 상승은 10.4%가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덧지·라인하에서 도산한 경영자, 노동자, 인원정리의 대상이 된 노동자는 고통을 받았다. 당시의 노동력 조사(총리국통계국)에 의한 공식통계도 연평균 완전실업자수는 1948년 24만 명, 1949년 38만 명에서 1950년에는 4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각각 0.7%, 1.0%, 1.2%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실업률이 낮은 것은 일본의 통계에서 완전실업자의 규정은 일주일에 1시간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많은 반실업자·불완전 실업자가 모두 취업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을 잃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표 8〉 기업정비상황 (1949년 2월 ~ 1950년 3월)

항 목	생 산 계 획	생 산 전 망	수 요
광 업	740	41,382명	8.1%
건설공업	344	15,282	3.0
제조공업	8,374	324,856	63.4
금 속	785	37,360	11.5
기 계	2,800	155,345	47.8
화 학	1,216	49,172	15.1
기 타	3,573	82,974	25.6
운수통신	779	88,425	17.3
기타산업	969	42,530	8.2
합 계	11,206	512,470	100.0

자료: 經濟企劃廳 戰後經濟史編纂室 編, [18], p. 281.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49년 2월부터 12월까지 884개의 사업소에서 정리가 이루어져 정리인원은 43만 5,000명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재정균형을 강력하게 추진한 덧지·라인에 따라 엄격하게 합리화가 요구된 공공부문에서는 대량의 정리인원이 발표되어 통고되었다.

1949년 5월 31일 행정기관 직원정원법이 공포(시행은 6월 1일)되어 28만 5,124명의 정리가 발표되었다. 4월 1일부터 전매와 함께 공사로 독립채산을 하게 된 국철에서는 7월 4일 제1차 인원정리 3만 700명, 7월 12일 제2차 인원정리 6만 3,000명이 발표되었다. 6월부터 체신성에서 분리되어 발족된 우정성과 전기통신성은 8월 11일 합계 2만 6,500명의 인원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민간 대기업에서도 이 시기에 電機를 비롯한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인원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sup>57)</sup> 4월부터 5월에 걸쳐 沖電氣 2,800명, 川崎차량 1,300명, 三菱전기 1,800명 등 대기업의 인원정리가 속속 발표되었다. 電機의 최대기업인 東京芝浦電氣는 1949년 6월 지주회사정리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44개 사업소 가운데 28개 업소를 처분하고 16개 사업소가 경영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이를 기회로 7월 5일 4,600명의 인원을 정리하였다. 이 시기의 인원정리는 대부분의 경우 경영자측이 해고대상자를 지명해서 통고한다는 일방적 조치였다. 경영자측은 이 기회에 공산당원과 산별회의계의 노동조합 활동가를 의식적으로 해고대상으로 지목하여 직장에서 추방하였다. 이 시기의 기업정비상황은 〈표 8〉과 같다.

57) 正村公宏 [21], p. 267.

## V. 결 론

뎃지·라인은 냉전의 격화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대일정책을 배경으로 추진된 일거안정정책이었다. 점령군의 압력하에서 일본은 이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뎃지·라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단일환율의 설정은 일종의 대수술이었다. 전후의 파괴 속에서 경제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던 일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뎃지·라인은 미국정부내에서 일본경제안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점령지구제를 명목으로 하는 미국원조에 무한정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경제하에서의 뎃지·라인은 상당히 위험성 있는 정책이었다. 안정공황은 사회불안을 낳고 질서의 동요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원조에 의존하지 않은 채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역의 정상화가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뎃지·라인하의 초긴축정책으로 일본경제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뎃지는 1949년 2월부터 약 3개월, 1949년 10~12월, 1950년 11~12월, 1951년 11~12월 네 차례에 걸쳐 來日하여 그 때마다 예산편성을 조사하면서 안정화 정책이 자리잡도록 감독하였다. 뎃지는 1949년도 예산안을 수정하여 지출보다 세입이 많은 중합균형예산을 편성하고, 흑자분으로 국채, 부흥금융금고채 등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부흥금융금고의 용자는 1948년으로 정지하고, 가격조정 보조금도 전면 폐지하였다. 이렇게 하여 국가재정 및 정부관계기관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하였다. 이어서 1949년 4월에 1달러=360엔의 단일환율을 설정하여 그 때까지의 복수환율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상품은 이 환율로 국제경쟁력을 얻어야 하였기 때문에 기업은 합리화에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대일원조가 일본의 경제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일원조 대충자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보이지 않는 무역보조금'으로 사용되어 온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명확히 적립하여 부금채등의 상황과 산업자금 공급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미국은 안정화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일본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일본경제의 재건을 확실하게 하고,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맹주로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도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에서의 공산주의의 침투를 철저히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정



책을 추진한다는 냉전대응형의 대일정책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자본주의적 사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 부활을 촉진한다는 체제 선택의 확정을 의미하였다. 이후 일본은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에 종속된 채 순조롭게 자본주의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 참고 문헌 ◆

1. 후지와라 아키라 외(노길호 해설·옮김),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의 현대역사』, 명진출판, 1991.
2. Borden, W. S., *The Pacific Alliance-United State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Japanese Trade, 1947-1955*,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4.
3. Cohen, T., *Remaking Japan: The American Occupation As New Deal*, The Free Press, 1987.
4. Schonberger, H. B., *Aftermath of War-Americans and the Remaking of Japan, 1945~1952*,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9.
5. 有澤廣巳·稻葉秀三 編, 『資料 戦後二十年史』2 經濟, 日本評論社, 1966.
6. 淺井良夫, 「ドッジ・ラインの歴史的意義」, 『土地制度史學』, 135호, 1992.
7. \_\_\_\_\_, 「ドッジ・ラインと經濟復興—マ-シャル・プランとの比較檢討」, 油井大三郎 外編, 『占領改革の國際比較—日本・アジア・ヨーロッパ—』, 三省堂, 1994.
8. 伊藤正直, 「ドッジ・ライン前後の『經濟計劃』と後期占領政策」, 東京大學 『經濟學論集』, 62(2), 1996.
9. 井上晴丸·宇佐美誠次郎, 『危機における日本資本主義の發達』, 岩波書店, 1951.
10. 大藏省財政史室 編,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3卷 アメリカの對日占領政策, 東洋經濟新報社, 1976.
11. \_\_\_\_\_,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5卷 歳計(1), 東洋經濟新報社, 1982.
12. \_\_\_\_\_,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15卷 國際金融·貿易, 東洋經濟新報社, 1976.
13. \_\_\_\_\_,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18卷 資料(2), 東洋經濟新報社, 1982.
14. \_\_\_\_\_,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20卷 英文資料, 東洋經濟新報

社, 1982.

15. 岡崎哲二・吉川 洋, 「戦後インフレーションとドッジ・ライン」, 香西泰・寺西重郎 編, 『戦後日本の経済改革-市場と政府』, 東京大学出版会, 1993.
16. 楫西光速 外編, 『日本資本主義の没落 VI』, 東京大学出版会, 1967.
17. 神田文人, 『昭和の歴史』 8 占領と民主主義, 小学馆, 1983.
18. 経済企画廳 戦後経済史編纂室 編, 『戦後経済史』 1 總観編, 原书房, 1992(復刻原本 1957年刊).
19. \_\_\_\_\_, 『戦後経済史』 3 財政金融 編, 原书房, 1992(復刻原本 1959年刊).
20. 鈴木武雄, 『財政史』, 東洋経済新報社, 1962.
21. 正村公宏, 『戦後史(上)』, 筑摩书房, 1985.
22. 宮崎正康・伊藤 修, 「戦時・戦後の産業と企業」, 中村隆英 編, 『日本経済史7:「計劃化」と「民主化」』, 岩波書店, 1989.
23. 中村隆英, 『日本経済-その成長と構造』 第3版, 東京大学出版会, 1993.
24. 中村政則, 「日本占領の諸段階」, 油井大三郎 外編 『占領改革の国際比較-日本・アジア・ヨーロッパ』, 三省堂, 1994.
25. 三和良一, 『概説日本経済史(近現代)』, 東京大学出版会, 1993.
26. 吉野俊彦, 『私の戦後経済史』, 至誠堂, 1965.
27. 由井正臣, 「1940年代の日本-世界制覇の挫折」, 朝尾直弘 外編 『岩波講座 日本通史』, 第19卷 近代4, 岩波書店, 1995.
28. 歴史学研究会 編, 『日本同時代史』 2 占領政策の轉換と講和, 青木書店, 1990.